

전북자치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

시군 부단체장회의 긴급 개최... 민생예산 신속집행·한파대책 논의 등 1분기까지 4조8000억·상반기까지 8조7000억원 전략적 적극 집행키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긴급 회의를 열었다.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한파 및 대설 대비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시군에 요

청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검토 △도민 체감형 신규 시책 발

굴로 민생 안정 직접 지원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설 명절 농산물 판촉행사 확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체 소비촉진 등 특별대책을 시군에 제안했다. 전북자치도는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5%를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상반기에는 63.9%를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1월 초 각종 사업계획 및 신속집행 추진계획 조기 수립 △부시장·부군수 주재 집행 점검회의 수시 개최 △이월 예산 및 보조사업 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한 민생 지원 강화 △계약 특례 적극 활용으로 집행 속도 가속화 등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민생 회복을 위해 1분기 예산을 집중 투입하며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을 대비해 전북자치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부 확인 및 관리 강화 △한파 쉼터 운영시간 야간까지 확대 △대설 예보(1월 7~9일) 대비 제설제 준비 등 재해 예방 선제 조치 등 선제적 대응을 시군에 요청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설 명절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하며, "지난해에 이어 2025년 올해도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을 통해 위축된 시장을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긴급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한파 및 대설 대비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시군에 요청했다.

전북서울·전주장학숙 2025년 입사생 모집

서울 120·전주 120명 모집... 내달 3일까지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2025년 신규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240명(서울 120명, 전주 120명)으로 2025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접수를 받아 2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장학숙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이며, 전주장학숙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대상자의 보호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 국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대상자 본인이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학생으로서,

성적 기준은 신입생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고교성적의 백분위 평균이 서울장학숙은 80점 이상, 전주장학숙은 60점 이상, 예체능 계열은 40점 이상, 재학생은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이 B학점(전주 C+ 학점) 이상이며 성적 50%, 생활정도 5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전주장학숙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입사생은 입사비 7만원과 매월 부담금 15만원만 납부하면 1일 3식 식사제공, 숙실은 2인 1실, 독서실, 복가페, 헬스장, 휴게실 등 장학숙의 편의시설을 추가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장학숙(02-580-6600), 전주장학숙(063-240-4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법원,尹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

의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사법 경찰관의 구금이나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이의신청 사건을 지난 3일 재판부에 배당한 바 있다. /뉴시스

'국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서 제출

조국혁신당, 법무부에... '내란 동조 행위, 반헌법적 사태 요인'

조국혁신당은 5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김성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히틀러의 지하부동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 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

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며 "국힘은 위헌정당이며 그러한 위헌적인 정당의 본질이 작금의 윤석열 옹호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강제해산 사유로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들고 "내란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설명절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 업소 단속

전북특사경, 24일까지 실시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6일부터 24일까지 한과류 등 설명절 다소비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한과류 제조·가공업체와 떡류, 전류 등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단속사항은 △제조·판매 시설·기구류 등 청결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건강진단 등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생산·작업기록, 원료수불부, 거래기록 등 법적서류 작성·보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계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본격 돌입

전북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2025년도 총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감염목 및 감염유류목 제거, 나무 주사, 복합 방제, 수종 전환 등 총 11개 방제 사업으로 상반기 방제사업은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를 100%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최근 몇 년간 전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이상 기후와 소나무 생육 여건 악화로 감염목이 급증했다.

지난 4월부터 전북 지역에서 약 7천본의 감염목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2,707본)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고창군과 무주군에서 신규 감염이 확인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중요

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는 올해 감염목과 감염유류목을 전량 방제하고, 나무주사 등을 통한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로 관리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집단적 방제 또는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의 소나무류를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수종전환 방제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또한 헬기, 드론, 지상 예찰을 연계한 3중 예찰 시스템을 통해 감염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봄·가을철 시기별로 도내 제조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산림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여부를 점검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QR코드 기반 소나무류 이력 관리를 통해 방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법 시행 주요 특례 - 농생명산업 선도 특례

농생명산업지구, 미래 농업 향해 대도약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농생명산업 특례 부여 등 전북특별법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한다.

농생명산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지구를 중심으로 농업 생산과 연계된 산업 집적화 및 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개발, 다양한 산업의 집적화 단지 조성,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등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시험하고 도전할 기회의 땅 농생명산업지구를 살펴본다.

▲미래농업 비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7개소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을 통해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7개소를 지난해 9월 선정하고,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에는 농업생산연계형과 혁신산업중심형으로 나뉘며, 각 지구는 농업생산 중심의 연관산업 집적화, 그린바이오 분야 신산업 선

남원 ECO스마트팜 등 선도지역 7곳 선정
농업·기업 상생협력 통한 새 모델 구축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규제 완화 본격

점 및 육성 등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각장 폐열 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는 국내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농업생산연계형 농생명산업지구다. 남원시 대산면 일대 60.1ha 규모에 2029년까지 1,121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스마트관개혁신단지, 스마트원예단지, 친환경에너지타운(폐열 활용, 미래농업 복합문화공간)을 육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바이오 산업을 연계해 농생명 스마트팜 허브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순창 미생물산업지구'는 혁신산업중심형으로, 전국 최초로 50만 건의 유용미생물과 생물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은행 등 농생명자원을 활용해 바이오 산업의 거점

으로 성장할 예정이다. 순창장류 특구와 관내 농공단지들 네트워크형으로 연계해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실증지원을 통한 연구 개발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해 바이오생물 분야의 메카로 육성한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새로운 모델 구축

농생명산업지구별 농생명자원의 특성화된 산업과 기반을 토대로 기업과 상생협력 모델을 기획 단계부터 수립한다. 농가 조직화를 통한 품질 균일화로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 스마트화, 농산물 제조·가공을 위한 지역 내 관련기업과 OEM 및 공장 신축, 기업의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 및 상품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남원 ECO 스마트팜지구는 첨단농

업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해 데이터 기반 농업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창 사시사철 감치지구는 김치원료 공급협약과 노지생산, 수확 및 보관(저온창고) 등에 대한 기술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 완화 본격 시행

전북특별법 농생명산업 특례분야는 1차로 12개 조문을 발굴해 본격 시행된다. 지구 내 농지법 특례(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농어촌정비 특례(20만㎡ 이상 마을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로써 규제를 완화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다.

귀농·귀촌 특례는 청년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해 자연재해 등 발생 시 초기 지원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주여건, 생활여건 등 지원을 통해 2029년까지 귀농·귀촌 인구 2만4천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출산 취약지역 임신부 이송지원 확대... 출산환경 개선 앞장

도, 분만 산부인과 없는 7개 군 대상... 산전 진찰 최대 15회 보장·임산부 교통비 최대 7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7개 군(원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을 위한 이송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신부들의 병원 이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취약지역의 임신·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임신 10주에서 임신 진단일로 변경되며, 산전진찰 지원 횟수도 기존 최대 12회에서 15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58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며, 분만 시 이송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1회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이번 확대는 고품질 임신부 증가 추세

와 그간의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특히, 초진부터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신부들이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더 많은 임신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4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만250건의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산전 진찰 지원이 9,337건, 분만 이송 지원이 913건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자치도는 2025년 출산 취약지역 임신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스마트 도시계획 체계적 수립 위해... 산·학·연·전문가 '머리 맞대'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 회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3일 새만금 지역의 첫 새만금 스마트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미래도시 비전에 대해 논의

된 이번 회의는 새만금지역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법적계획인 스마트 도시계획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그간의 새만금 사업의 경과와 핵심 권역별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접목, 기업 참여 등의 구체

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공공기관-민간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히, 새만금 지

역이 투자유치가 활발하고 공항·항만 등 인프라 수준이 우수하여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산업단지 등을 도입하기 적합한 환경이라면서 새만금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만호 기자